

2018년 소방기본법 기본서 정오표 및 추록(18.6.30)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62 52번 해설	행정안전부령	대통령령
p 88 25번	금수탑	금수탑
p 152 (1)②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삭제
p 249 02(1)	자금의 출연	자금을 출연
p 250 (2)⑧	안전원	협회
p 252 (3)①②	안전원	협회
p 256 소방산업의 육성 3)①	안전원	협회
p 259 21번	○	×
p 270 (2)①	총회 또는 이사회	이사회
p 273 (1)	3천만원	5천만원
p 273 (2)	1천 500만원	3천만원
p 277 벌칙 1)	3천만원	5천만원
p 277 벌칙 2)	1천 500만원	3천만원
p 279 9번, 11번	3천만원	5천만원
p 279 14번, 11번	1천 500만원	3천만원
p 282 1번 M 및 해설	3천만원	5천만원
p 282 2번 해설	1천 500만 원 3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p 282 3번 문제 및 해설	1천 500만 원	3천만원
p 283 4번 정답 및 해설	G 3천만원	M 5천만원
p 284 8번 해설	3,000만원	5,000만원
p 285 12번 해설	3천만원	5천만원
p 286 13번 A	3,000만원	5,000만원
p 290 27번 문제 및 해설	3천만원	5천만원
p 290 27번 해설	1천 500만 원	3천만원
p 320 제50조	3천만원	5천만원
p 320 제51조	1천 500만 원	3천만원

소방기본법[시행 2018.8.10.] [법률 제15365호, 2018.2.9.,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시행 2018.6.27.] [법률 제15532호, 2018.3.27.,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현행법 제25조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 2018.6.27.] [대통령령 제128995호, 2018.6.2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방법을 정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①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2 신설) :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및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함.
- ②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신설) :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③ 손실보상 관련 규정 신설(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신설, 제15조 및 제16조)

- ㉠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소방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18.6.27.] [행정안전부령 제62호, 2018.6.2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령 개정에 따른 교재 추록 및 수정

(4)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및 설치기준

- ①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영 제2조의2)
 -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 ㉡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규칙 제6조 제3항, 제4항)
 - ㉠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 ㉡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p 170 ③ ㉠ 아래 다음 내용 추가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시·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p 165 (3) 아래 다음 내용 추가

(4)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법 제21조의2, 시행 18.8.10.)

-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56조②)

(2) **회원의 관리** 부분을 (3) **회원의 관리** 로 하고 아래 내용 추가

(2)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안전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 ㉠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 ㉢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 ㉣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⑥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2)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분을

(9)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로 하고 아래 내용 추가

(2)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③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3)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①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소방청장등)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⑦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 소속 소방공무원
 -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5)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보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보상위원회의 운영

-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7)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건의 청구인인 경우
 - ㉡ 위원이 심의 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위원이 심의 건의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건의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 위원이 해당 심의 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8)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등

- ①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1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②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p 276

1. 일반기준

나 대체 및 다 추가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50	100	150	200
나.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100 50	150 100	200 150	200 200
다.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20	50	100	100
라.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200
마. 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의2	100			
바.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00			
사.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5호	50	100	150	200
아.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6호	200			

p 311

제25조 ③ 아래 다음 내용 추가

-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p 319

둘째 줄 아래 추가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